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 ❖ 본 지침은 인천광역시 기부식품제공사업을 담당하는 군·구 및 사업장 직원의 업무 안내서로서 사업장 운영의 공통적 적용을 위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 본 지침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하여 인천시 실정에 맞게 작성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와 상이한 내용은 본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본 지침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하시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 등 관련 법규와 대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조문을 우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주요변경 사항]	3
I. 개요	16
1. 목적 및 연혁	16
2. 사업추진체계	17
3. 운영형태	17
4. 주요현황	19
II.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리	20
1. 기부식품제공사업 신고제도	20
2. 기부식품 이용자 관리	23
3.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24
4. 기부식품 등의 관리	27
5.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의 철회·폐업	31
6.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31
7.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33
III. 인력 관리 및 보조금 지원계획	36
1. 기부식품사업장 인력 관리	36
2. 기부식품사업장 운영보조금 지원	38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39

IV. 기타 행정사항	41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42
<붙임 2> 기부식품제공사업 계획서(예시)	43
<붙임 3> 사업자 신고증	44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46
<붙임 5> 기부식품 영수증(예시)	48
<붙임 6> 기부금 영수증	49
<붙임 7>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	50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51
<붙임 9> 철회(폐업) 신고서	57
<붙임 10>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58
<붙임 12>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59
<붙임 13> 2016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 급여기준	62
<첨부1>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 보수지급관련 세부 운영기준 ...	69
[별지1] 시간외근무명령서	81
[별지2] 시간외근무명령대장	82
[별지3]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통보	83
[별지4] 시간외근무확인대장	84
<붙임 1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87
<붙임 15>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붙임 1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7
<붙임 17> 인천광역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9
<붙임 18> 인천광역시 푸드뱅크·마켓 현황	101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주요변경 사항

분야	쪽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유																														
I. 개요																																		
1.목적 및 연 혁	16	나. 연혁	나. 연혁 ‘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16쪽 참고	현행화																														
2.사업 추진 체계	17		‘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17쪽 참고	현행화																														
4.주요 현황	19	가. 운영형태별 <table border="1"><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계</th><th rowspan="2">전국 푸드 뱅크</th><th rowspan="2">광역 푸드 뱅크</th><th colspan="2">기 초</th></tr><tr><th>푸드 뱅크</th><th>푸드 마켓</th></tr><tr><td>개 소</td><td>435</td><td>1</td><td>17</td><td>291</td><td>126</td></tr></table> 나. 지역별(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제외) 다. 운영주체별(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제외)	구 분	계	전국 푸드 뱅크	광역 푸드 뱅크	기 초		푸드 뱅크	푸드 마켓	개 소	435	1	17	291	126	가. 운영형태별 <table border="1"><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계</th><th rowspan="2">전국 푸드 뱅크</th><th rowspan="2">중앙 물류 센터</th><th rowspan="2">광역 푸드뱅크</th><th colspan="2">기 초</th></tr><tr><th>푸드 뱅크</th><th>푸드 마켓</th></tr><tr><td>개 소</td><td>437</td><td>1</td><td>1</td><td>17</td><td>291</td><td>127</td></tr></table> 나. 지역별(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제외) ‘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19쪽 참고 다. 운영주체별(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제외) ‘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19쪽 참고	구 분	계	전국 푸드 뱅크	중앙 물류 센터	광역 푸드뱅크	기 초		푸드 뱅크	푸드 마켓	개 소	437	1	1	17	291	127	현행화
구 분	계	전국 푸드 뱅크					광역 푸드 뱅크	기 초																										
			푸드 뱅크	푸드 마켓																														
개 소	435	1	17	291	126																													
구 분	계	전국 푸드 뱅크	중앙 물류 센터	광역 푸드뱅크	기 초																													
					푸드 뱅크	푸드 마켓																												
개 소	437	1	1	17	291	127																												
II.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리																																		
1.기부 식품 제공 사업 신고 제도	22	라. 신고절차 ①(생략) *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 [붙임 3] : 사업자 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운영형태(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푸드마켓의 경우 전용면적 유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고려 ※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점검	라. 신고절차 ① (현행과같음) * <u>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u>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를 <u>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u> 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u>확인하고</u> , 시행령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u>신고필증(사업자 신고증)</u> 을 신고인에게 교부 ※ [붙임 3] : 사업자 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운영형태(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푸드마켓의 경우 <u>적정 전용면적 확보 여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u> 등을 고려 ※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점검	내용 보완																														

분야	쪽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유
2.기부 식품 이용 자 관리	23	<p>나. 이용자 선정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이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 - 이용대상자에게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청서를 받아 보관 ※ [붙임 4] :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이용자 중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구성원수, 경제활동, 학비 등을 감안하여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제공 ※ 이용자 선정 시 기부식품 지원 필요성 여부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의하되,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저소득층 등)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자에게 명단 제공 가능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받는 노인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시,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며,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제공 가능 ○ 운영주체의 바자회·행사 등 개최, 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기부식품 제공을 금지 	<p>나. 이용자 선정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u> * <u>‘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라 함은 ①긴급지원대상자, ②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③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계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말함(각종 조사결관 반영, 상담실시 등)</u> - 이용대상자에게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청서를 받아 보관 ※ [붙임 4] :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 <u>다만 개인 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에게 제공 가능(가족구성원수·경제활동·학비 등 감안, 상담 실시)</u> ※ 이용자 선정시 기부식품 지원 필요성 여부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의하되,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저소득층 등)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자에게 명단 제공 가능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u>이용자로부터 비용·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u> -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시 또는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제공 가능 ※ <u>시설·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시설·단체에 균형있게 배분</u> ○ <u>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주체가 개최하는 바자회·행사,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 등에는 기부식품 제공 금지</u> 	이용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현

분야	쪽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유
	23	<p>다. 이용자 변경 : 기부식품 제공 기간 설정·운영</p> <p>○ 이용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을 제공.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p> <p>- 시설·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1년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p> <p>○ 제공기간 설정 기준</p> <p>(1) 1순위(1년) :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p> <p>(2) 2순위(9개월) : 차상위계층</p> <p>(3) 3순위(6개월) : 기부식품 제공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p> <p><신 설></p>	<p>다. <u>기부식품 제공 기간 설정·운영 및 이용자 변경</u></p> <p>○ <u>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9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이용자별 제공기간을 준수하도록 함.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절차를 거쳐 연장 가능</u></p> <p>-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p> <p>○ 제공기간 설정 기준</p> <p>(1) <u>1순위(1년) : 긴급지원대상자</u></p> <p>(2) <u>2순위(9개월)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u></p> <p>(3) <u>3순위(6개월)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u></p> <p>※ 기부식품제공사업 업무처리흐름도</p>	지역내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을 추가 하고, 제공기간 설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표현
2.기부 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24	<p>나. 영수증 발급</p> <p>①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의 경우)</p> <p>-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음·식료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식품을 기부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p> <p>※ [붙임 5] : 기부식품 영수증(예시)</p> <p>- 기부식품 제공사업자가 기부자에게 발급하는 기부식품 영수증은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처리(필요경비) 가능</p> <p>- 기부식품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p> <p>[참고 : '기부식품 영수증' 법적 근거] (생략)</p>	<p>나. 영수증 발급</p> <p>①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의 경우)</p> <p>-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음·식료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식품을 기부하였을 경우에 한해 <u>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으로 출력된 기부식품 영수증(붙임5) 발급</u></p> <p>- 기부식품 제공사업자가 기부자에게 발급하는 기부식품 영수증은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 가능</p> <p>- 기부식품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p> <p>[참고 : '기부식품 영수증' 법적 근거] (현행과 같음)</p>	문구 정리

분야	쪽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유																								
	25	<p><참고> 영수증 발급 종류</p> <table><tr><th>기부유형 기부자</th><th>음·식료품</th><th>非 음·식료품</th><th>후원금 (현금)</th></tr><tr><td>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td><td>기부식품 영수증</td><td colspan="2">기부금 영수증</td></tr><tr><td>기타 기업·개인</td><td></td><td colspan="2"></td></tr></table> <p>※ 운영 주체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단체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p>	기부유형 기부자	음·식료품	非 음·식료품	후원금 (현금)	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	기부식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p><참고> 영수증 발급 종류</p> <table><tr><th>기부유형 기부자</th><th>음·식료품</th><th>非 음·식료품</th><th>후원금 (현금)</th></tr><tr><td>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td><td>기부식품 영수증</td><td colspan="2">기부금 영수증</td></tr><tr><td>기타 기업·개인</td><td></td><td colspan="2"></td></tr></table> <p>※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단체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p>	기부유형 기부자	음·식료품	非 음·식료품	후원금 (현금)	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	기부식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운영 주체의 의미를 명확히 함
기부유형 기부자	음·식료품	非 음·식료품	후원금 (현금)																									
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	기부식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기부유형 기부자	음·식료품	非 음·식료품	후원금 (현금)																									
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	기부식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26	<p>라. 기부식품 관리시스템(Food Management System : FMS) 사용</p> <p>○ FMS는 식품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 식품 모집 및 제공내역 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p> <p>※ [붙임 10] : 기부관리시스템(FMS) 사용 매뉴얼</p>	<p>라.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oodbank Management System : FMS) 사용</p> <p>○ 기부물품 관리시스템은 식품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내역 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p> <p>※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시스템 내부의 전자매뉴얼 또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p>	○기부식품 관리시스템의 명칭 변경 (기부식품 관리시스템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매뉴얼은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변경																								
	26	<p>바. 기부금(후원금 등)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p> <p>○ 운영주체(법인 등) 및 사업장의 기부금(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개설·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p> <p>- 법인 산하의 사업장이더라도 법인의 기부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사업장 고유의 기부금</p>	<p>바. 기부금(후원금 등)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p> <p>○ 운영주체(법인 등)는 운영주체와 사업장의 기부금(후원금)전용계좌*를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개설·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p> <p>- 법인 산하의 사업장이더라도 법인의 기부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사업장 고유의 기부금</p>	의미 명확화																								

분야	쪽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유
		계좌를 두어야 함 * 사업장 명칭이 부기된 운영주체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여, 계좌의 용도를 사업장 기부금 모집·사용 전용으로 지정	계좌를 두어야 함 * (전용계좌)사업장 명칭이 부기된 운영주체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여, 계좌 의 용도를 사업장 기부금 모집·사용 전용 으로 지정	
4.기부 식품 의 관리	27	가. 기부식품 안전성 확보(법 제5조제2항) ○ (생략) ○ (생략) <신 설>	가. 기부식품 안전성 확보(법 제5조제2항) ○ (2015년 사업지침과 같음) ○ (2015년 사업지침과 같음) ○ <u>위해상품차단시스템 정보의 활용</u> - <u>사업자는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에서</u> <u>제공하는 위해상품정보의 상세내역을 면밀</u> <u>히 검토하여 무해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u> <u>한하여 처리하여야 함</u>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위해성 여부 확인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배분과정의 바코드 입력 시 위 해상품 내역이 있는 경우 차단 알림 • 위해상품 연계관리 화면의 상세내역 을 확인 후 처리 <p>*위해상품 차단알림은 동일 바코드의 위해상품 등록내역을 식별하여 경고 하는 기능으로, 해당 바코드의 모든 상품이 위해 상품인 것은 아님(즉, 생 산시기와 생산처(공장) 등이 다른 경 우에는 위해상품이 아님)</p> </div>	기부식품 관리시스 템 개편에 따른 기능 등 추가 *위해상품 차 단 판 매 시 스 템(상공 회 의 소 유 통 물 류 진 흥 원) 과 의 연계
	28	나.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 유통기한 관리 : 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참고> 표 참조) (1) 모집가능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모집 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취식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기부식품 을 모집하되, 모집가능기한을 준수 ※ 모집가능기한에 맞지 않은 식품기부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 부자에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 등 그 사유를	나.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 유통기한 관리 : 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참고> 표 참조) (1) 모집가능 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모집 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취식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기부식품을 모집하되, 모집가능기한을 준수 ※ 모집가능기한에 맞지 않은 식품기부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 자에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 등 그 사유를 충	농산물의 모집가능 기한 확대

분야	쪽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유
		<p>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식품·장류·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육가공류는 최소 15일, 농산물의 경우 최소 7일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p>(2) 배분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가능기한 내 식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취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유통기한 잔여일수를 고지 - 유통기한이 적게 남아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취식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우선 즉시 배분 - 제빵류의 경우 식품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즉시 취식이 가능한 시설·단체나 개인에게 즉시 배분) <p><참고>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반 	<p>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식품·장류·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육가공류는 최소 15일, 농산물의 경우 <u>최소 5일</u>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p>(2) 배분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가능기한 내 식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취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유통기한 잔여일수를 고지 - 유통기한이 적게 남아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취식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우선 즉시 배분 - 제빵류 및 <u>농산물의</u> 경우 식품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즉시 취식이 가능한 시설·단체나 개인에게 즉시 배분 <p><참고>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석밥 • 신선식품/농산물에 김치류 추가 	
	29	<p>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사고 사전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식품사고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부식품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군·구청에 신속히 보고 - (생략) 	<p>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사고 사전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사업안내와 같음) ○ 식품사고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업자는</u>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부식품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군·구청에 <u>즉시</u> 보고 - (생략) 	보고 주체의 명확화
8.시정 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	34	<p>마. 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의견청취 등의 절차 <p>(1) 서면통지 : 해당 위반행위 조사·확인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p>	<p>마. 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전통지·의견청취 및 부과·징수 등 절차</u>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참조 <p>(1) 서면통지 : 해당 위반행위 조사·확인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p>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 반영

분야	쪽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유
처분		<p>※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기재</p> <p>(2) 의견제출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p> <p>(3)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p> <p>→ 이의제기시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실시</p> <p>○ (생략)</p>	<p>※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기재</p> <p>(2) 의견제출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p> <p>(3)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u>60일</u>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p> <p>→ <u>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u>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실시</p>	
III. 인력 관리 및 보조금 지원계획				
1.기부 식품 제공 사업 장 인력 관리	36	<p>나. 종사자 채용</p> <p>○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p> <p>○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p> <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종사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p> <p>○ <신설></p>	<p>나. 종사자 채용</p> <p>○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p> <p>○ <삭제></p> <p>○ 범죄경력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p>	2016 사회 복지시설 공통지침 적용
	38	<p>다. 종사자 관리</p> <p>○ 종사자 교육훈련</p> <p>- 사업자는 기부식품 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p> <p>※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국푸드뱅크·광역푸드뱅크 등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식품안전 교육기관(식품위생법상)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p> <p>- 기부식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등 교육훈련 권장</p> <p>※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전산교육,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교육 등</p>	<p>나. 종사자 관리</p> <p>○ 종사자 교육훈련</p> <p>- 사업자는 기부식품 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p> <p>※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국푸드뱅크·광역푸드뱅크 등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식품안전 교육기관(식품위생법상)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p> <p>- 기부식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등 교육훈련 권장</p> <p>※ <u>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u> 전산교육, <u>개인 정보보호 교육</u>,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교육 등</p>	사업장의 종사자 교 육훈련 내 용 추가

분야	쪽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유
2.기부 식품 사업 장 운영 보조 금 지원	39	<신설>	○ 인건비 : 예산전용금지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재무 회계규칙 반영
3.보조 금 교부 신청 및 집행	39	나. 시비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 (생략)~「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2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다. 사업수행 실적보고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 등 - 시비보조사업 실적보고는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한다.	나. 시비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다. 사업수행 실적보고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 등 - 시비보조사업 실적보고는 매년 1월 20일까지 제출한다.	조례개정 반영
IV.기타행정사항				
	41	나. 기타사항 ○ 기부식품 사업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지침과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른다. ○ (생략) ○ 기타 기부식품 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근 로기준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의 법규 준수	나. 기타사항 ○ 기부식품 사업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지침과 보건복지부 <u>기부식품제공사업</u> 안내에 따른다 ○ (생략) ○ 기타 기부식품 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근 로기준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u>2016년 사 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u> 등의 법규 준수	지침명칭 명확화
붙임자료				
	34	<붙임 2> 기부식품제공사업 계획서(예시)	<붙임 2> 기부식품제공사업 계획서(예시)	내용 구체 화
	37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자구 정리
		<붙임11>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사용 매뉴얼	<삭 제>	○ 시스템 명칭 변경 (기부식품 관리시스 템 → 기 부물품 관

분야	쪽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유
				리시스템) ○ 시스템 내부의 매뉴얼 또는 전 국푸드 뱅크 홈 페이지 자료실 에서 다 운
	59	<붙임 12>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붙임 11>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내용 구체 화
	65	【별표1】 2015년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직원 봉급 기준표	【별표1】 2016년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직원 봉 급 기준표	2016년도 기준적용
	65	【별표2】 2015년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직원수 당 지원 기준표 ○ 연장근로수당 : 보조금으로는 월8시간까지 지원(19:00시부터 적용)하며 초과액은 운영주체 전입금으로 충당	【별표2】 2016년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직원수 당 지원 기준표 ○ 연장근로수당 - 보조금으로는 월8시간까지 지원하며 초과액 은 운영주체 전입금으로 충당 - 연장근로시간은 야간근무의 경우 19:00를 초과 하였을 경우에만 18:00부터 초과분에 대해 인정	2016년 사 회복지시 설 공통지 침적용
	66	【별표3】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인정경력	【별표3】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인정경력	2016년 사 회복지시 설 공통지 침적용
	71	<첨부1>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 보수지급관 련 세부 운영기준 1. 경력기간의 계산 마. 호봉의 확정 (1)초임 호봉의 확정 ○ (생략)	<첨부1>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 보수지급관 련 세부 운영기준 1. 경력기간의 계산 마. 호봉의 확정 (1)초임 호봉의 확정 ○ (생략)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직원 호봉책정(경력 인정) 부정적 사례 다수 발생 ⇒ 호봉책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관할 군수·구청장이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확인(직원 채용 시 및 승급 시 관련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및 담당부서에서 확인 조치)	2016년 사 회복지시 설 공통지 침적용

분야	쪽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유
	73	<p>2.. 수당</p> <p>가. (생략)</p> <p>나. 가족수당</p> <p>(1) 생략</p> <p>(2) 생략</p> <p>(3) 부양가족 범위</p> <p>① 배우자</p> <p>②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p> <p>③ 20세미만의 자녀 및 20세 이상의 자녀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p>	<p>2.. 수당</p> <p>가. (생략)</p> <p>나. 가족수당</p> <p>(1) 생략</p> <p>(2) 생략</p> <p>(3) 부양가족 범위</p> <p>① 배우자</p> <p>②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및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p> <p>*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함</p> <p>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p> <p>* 직계비속은 재(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함</p>	
	76	<p>3. 육아휴직</p> <p>(1) 생략</p> <p>(2)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p> <p>○ (생략)</p> <p>-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함</p> <p>○ 지급액</p> <p>-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 : 월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p> <p>-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 지급</p> <p>-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p>	<p>3. 육아휴직</p> <p>(1) 생략</p> <p>(2)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p> <p>○ (생략)</p> <p>-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1명만 지급</p> <p>○ 지급액</p> <p>-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 : 월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p> <p>※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 : 100분의 15, 7월 1일 이후 : 100분의 25</p> <p>-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 지급</p> <p>-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p> <p>※ 육아 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p>	2016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 적용

분야	쪽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유
		<p>○ (생략)</p> <p>○ (생략)</p> <p>※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p>	<p>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p> <p>○ (생략)</p> <p>○ (생략)</p> <p>※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문의</p>	
77	4. 출산전후휴가 급여	<p>(1)~(4) 생략</p> <p>(5) 지급액</p> <p>- (생략)</p> <p>※ 통상임금이란?</p> <p>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p>	<p>4. 출산전후휴가 급여</p> <p>(1)~(4) 생략</p> <p>(5) 지급액</p> <p>- (생략)</p> <p>※ 통상임금 : 통상임금산정지침 제2조(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p> <p>-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p>	2016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 적용
78	10 사용자 부담금	<p>○ 고용보험료율 : 사용자 1.1%</p> <p>계 1.75%</p>	<p>6. 사용자 부담금</p> <p>○ 고용보험료율 : 사용자 0.9%</p> <p>계 1.55%</p>	자구수정
85	【별표4】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휴가 규정	<p>연차휴가</p> <p>① ~⑤ (생략)</p> <p>⑥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일수는 차기년도 휴가에서 결근일수를 공제한다.</p> <p>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 한 것으로 본다.</p> <p>·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p> <p>· 임신 중의 여성이 보호를 위한 휴가로 휴업한 기간.</p>	<p>【별표4】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휴가 규정</p> <p>연차휴가</p> <p>① ~⑤ (생략)</p> <p>⑥ (삭제)</p> <p>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 한 것으로 본다.</p> <p>·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p> <p>· 임신 중의 여성이 보호를 위한 휴가로 휴업한 기간.</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p>	2016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 적용

분야	쪽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직원수당 중 연차보상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별도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p>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u>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p> <p>⑧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85	<p>병가</p> <p>① 연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질병 또는 전염병(보균자)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 이외 및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일이 부족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②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③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p>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p>	<p>병가</p> <p>①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p>② 병가기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 : 연 60일 범위 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연 180일 범위 내 <p>③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음</p> <p>④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p> <p>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p>	2016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 적용
	86	<p>공가</p> <p>①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검사나 근무연습, 징·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집될 때.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p>공가</p> <p>①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2016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 적용
	86	<p>특별휴가(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조부모·외조부모 : 2일 	<p>특별휴가(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조부모·외조부모 : 3일 	2016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 적용

분야	쪽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유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침적용
	86	<p>기타사항</p> <p>①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p> <p>② 연차휴가를 제외한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휴가 사용일수로 산정된다.</p> <p>③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p>	<p>기타사항</p> <p>① <u>연차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u></p> <p>② <u>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u></p> <p>③ <u>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미산입</u></p> <p>④ <u>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함</u></p>	2016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적용
	100	<신설>	<붙임16>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자료 첨부
	102	<신설>	2016년 인천 푸드뱅크·마켓 현황	참고자료 첨부

I 개요

1. 목적 및 연혁

가. 목적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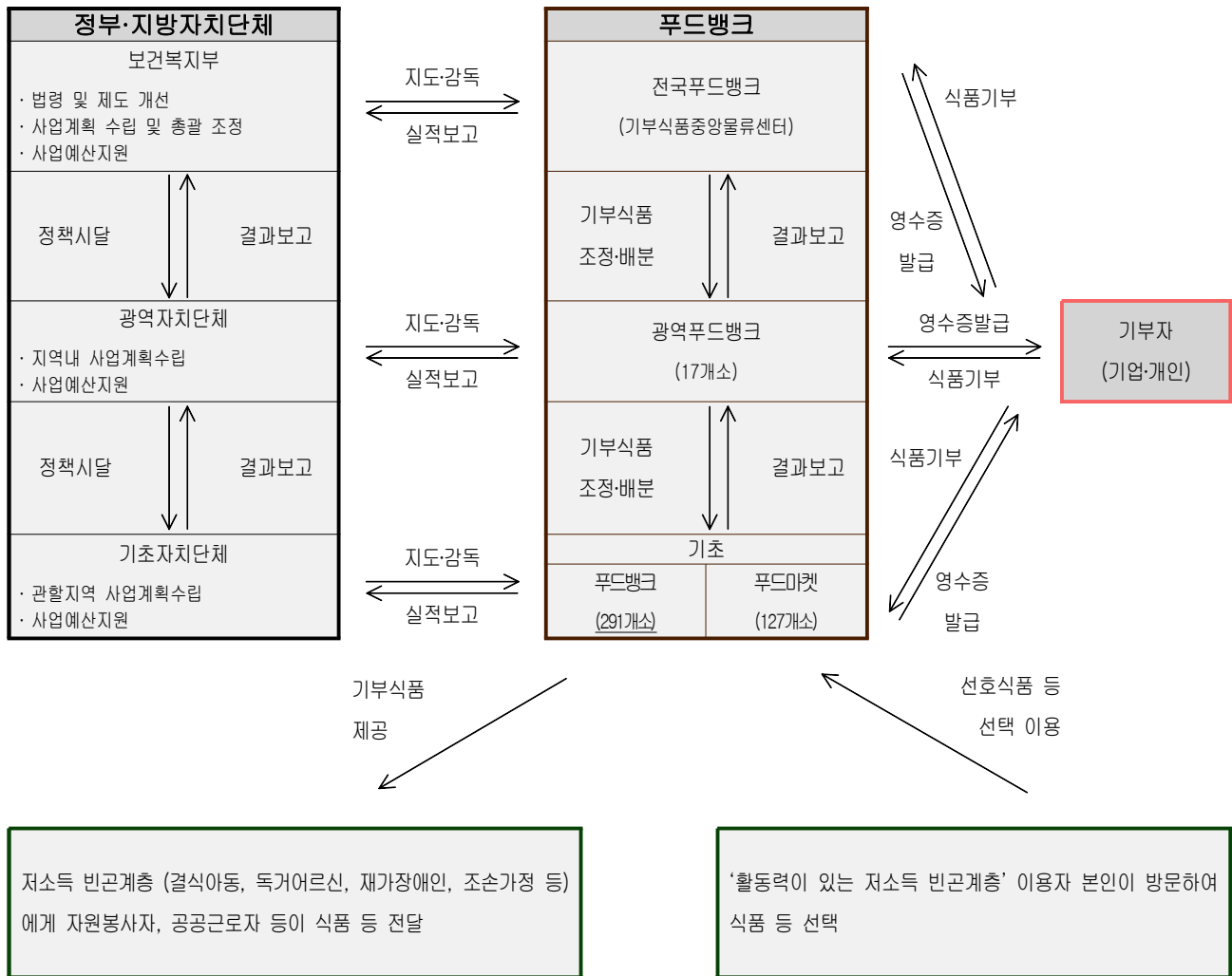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정의

- ◇ **푸드뱅크** :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 등 기탁자들로부터 식품을 제공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이나 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단체, 일종의 식품중개소
- ◇ **푸드마켓** : 저소득 소외계층 시민이 이용자 등록 후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 및 생필품을 무료로 이용하는 마켓

나. 연혁

- '98. 1 : 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서울, 부산, 대구, 과천)
- '00. 5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보건복지부)
- '01. 8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구축·운영(www.foodbank1377.org)
- '02. 7 : 「기부식품 관리시스템(FSM)」 구축·운영
- '06. 3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06.3.24 공포, '06.9.25 시행)
- '09. 9 :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개소(대전 유성구 대정동 302-1)
- '11. 4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11.4.28 공포·시행)
- '15.12 : 차세대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구축
- '15.12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437개소 운영
(전국 및 물류센터 각 1개소, 광역 17개소, 기초 418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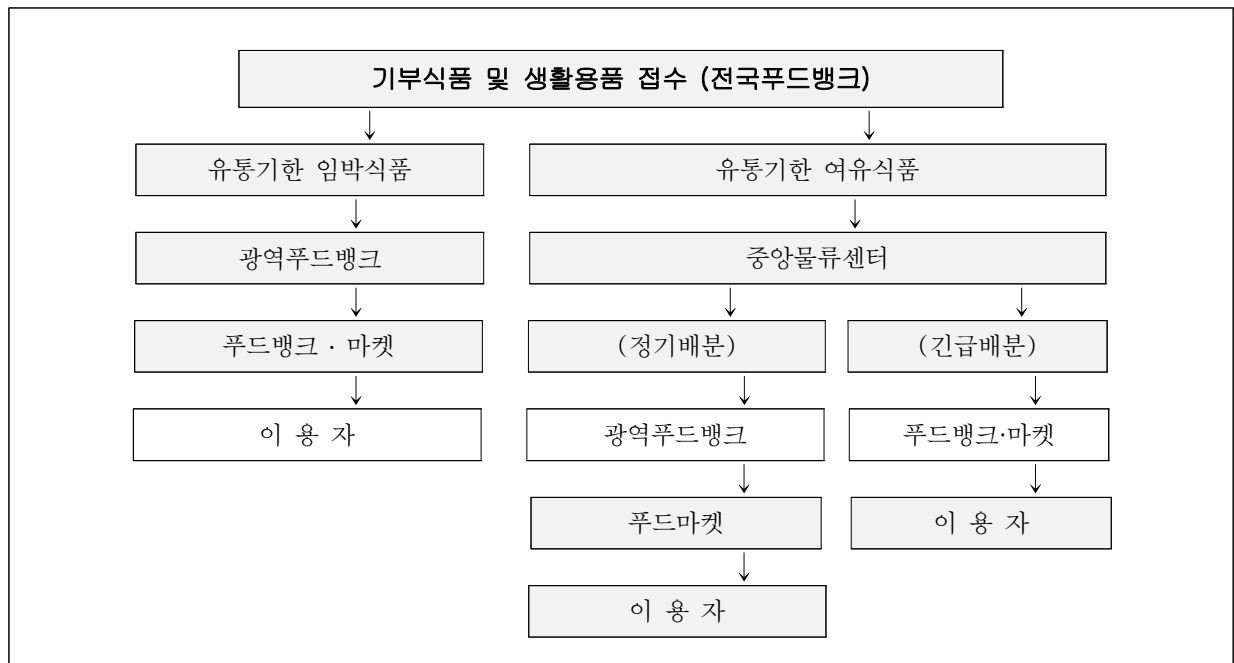
2. 사업추진체계



3. 운영형태

가. 전국푸드뱅크

- 운영목적
 - 식품나눔 문화 활성화, 기부식품의 전국적인 모집 및 배분, 사업프로그램의 개발 및 집행,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
 -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00)
- 역할
 -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배분하고,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균형배분 실시



- 기부식품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훈련
- 중앙물류센터, 기부식품 관리시스템(FMS) 운영
- 지역사회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홍보
-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국보험 가입
- 시·도 및 시·군·구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평가

나. 광역푸드뱅크

- 운영목적
 - 광역 단위의 기부식품 모집 및 배분, 기초단위 사업장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국단위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사업자 중 광역푸드뱅크를 지정 또는 위탁운영
 -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미신고시 신고 필요
- 역할
 - 시·도 단위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운영·관리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푸드뱅크와의 협력을 통한 기부식품 모집 및 균형배분 지원
 - 시·도 단위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용자 상담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관할 시·도 및 전국푸드뱅크)
 - 시·군·구 단위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교육지원 및 관리

다. 기초푸드뱅크 및 기초푸드마켓

- 지역 내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기부식품 모집·관리·배분
- 지역 내 기부식품 이용자 발굴·선정
- 연도별 사업계획(후원위원회 포함), 분기별 사업실적 및 예·결산 보고
- 전국푸드뱅크 및 광역푸드뱅크와의 협력

4. 주요 현황

가. 운영형태별

구 분	계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광역푸드뱅크	기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 소	437	1	1	17	291	127

나. 지역별(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제외)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광역푸드뱅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기초푸드뱅크	26	19	12	10	15	9	6	1	52	19	23	20	15	24	18	19	3	291
기초푸드마켓	33	12	7	14	3	8	2	1	17	1	5	6	5	3	4	4	2	127
계	60	32	20	25	19	18	9	3	70	21	29	27	21	28	23	24	6	435

다. 운영주체별(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제외)

(단위 : 개소,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자원봉사센터	시군구	개인	기타 ¹⁾	계
개소	231	36	47	37	6	4	12	22	40	435
이용시설	193	34	39	27	6	4	12	22	34	371
생활시설	38	2	8	10	-	-	-	-	6	64
비율 (%)	53.1	8.3	10.8	8.5	1.4	0.9	2.8	5.1	9.2	100

II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제공사업 신고제도

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

-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 그 밖의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나. 기부식품 사업자(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2조)

- ① 기부식품 사업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 ②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직영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제외)에게 제공하고,
 - ③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을 대상으로 기부식품을 제공해야 함
- ※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20 미만은 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의 목적사업인 재가복지사업에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보조금 지원 이외에 사업 추가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

< 참고 : 법적 정의(법 제2조) >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신고의 종류 및 요건

- ① 임의신고(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 신고대상 :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임의신고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 신고할 수 있음
 - 임의신고 요건 :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냉동 적재고, 온도계), 냉장·냉동시설 보유

< 임의 신고 시설과 설비 기준 >

1. 보관창고

가.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보관창고는 임차 사용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 분리·구획 이용가능

2. 운반차량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3. 냉장(냉동)시설 :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함

② 당연신고(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2)

- 신고대상 :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식품에 한함)인 사업자는 당연신고 요건을 갖추어 군수·구청장에 신고(의무 부과)

· 당연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

※ 임의신고 사업자가 전년도 기부식품 장부가액 3억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 당연신고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당연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고요건

(1) 시설·설비 기준 : 16.5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냉동 적재고, 온도계), 1,000리터 이상의 냉장·냉동시설 보유

(2) 인력기준 :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

< 당연신고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

1. 보관창고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 가능

2. 설비

가. 운반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

3. 인력 :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라. 신고절차

- ①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고종류(임의신고, 당연신고)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춘 후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붙임1] : 사업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장의 운영주체 변경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

- 사업계획서[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포함]

*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붙임 2] : 기부식품제공 사업계획서(예시)

- 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고, 시행령 제4조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신고필증(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 [붙임 3] : 사업자 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운영형태(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푸드마켓의 경우 적정 전용면적 확보 여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

※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점검

마. 추가 조치사항

- 사업자신고를 수리한 군수·구청장은 신규 사업자 신고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신규 사업자는 동 사실을 인천광역시푸드뱅크를 통해 전국푸드뱅크에 보고
- 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임의신고사업자의 전년도 기부식품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당연신고 사업자로 신고하도록 조치*
 - 군수·구청장이 사업자신고를 수리한 후 해당 사업자는 동 사항을 인천광역시푸드뱅크를 통해 신속히 전국푸드뱅크에 보고
 - * 군수·구청장은 당연신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사업자 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새로 교부(신고의 종류 : 임의→당연)하되, 사업자 신고증 뒷면에 최초 사업자 신고일 및 변경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신고한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 및 사업장 명칭이 표기된 현판을 설치하여 푸드뱅크(마켓)임을 명시

2. 기부식품 이용자 관리

가. 이용자 발굴

- 지역 내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파악하여 이용자 적극 발굴
-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기타 민간복지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

나. 이용자 선정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이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
-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라 함은 ①긴급지원대상자, ②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③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말함(각종 조사결과 반영, 상담실시 등)
- 이용대상자에게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청서를 받아 보관
- ※ [붙임 4] :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 다만 개인 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에게 제공 가능(가족구성원수·경제활동·학비 등 감안, 상담 실시)
- ※ 이용자 선정시 기부식품 지원 필요성 여부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의하되,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저소득층 등)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자에게 명단 제공 가능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시,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며,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 급식소, 지역아동센터에는 제공 가능
- ※ 시설·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시설·단체에 균형있게 배분
-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주체가 개최하는 바자회·행사,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 등에는 기부식품 제공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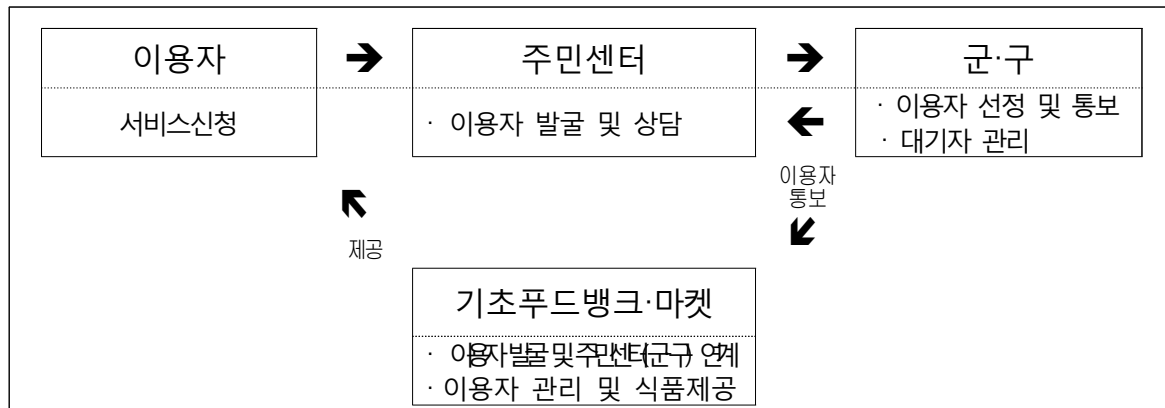
다. 기부식품 제공 기간 설정·운영 및 이용자 변경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9개월, 1년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이용자별 제공기간을 준수 하도록 함.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절차를 거쳐 연장 가능
-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 **제공기간 설정 기준**

- (1) 1순위(1년) : 긴급지원대상자
- (2) 2순위(9개월)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 (3) 3순위(6개월)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기부식품제공사업 업무처리흐름도**



라.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법 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사업자별 손해보험 가입 불필요)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기부식품제공사업자에 한함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http://www.foodbank1377.org> 공지사항 참조

3.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가. **기부식품 및 기부금품(후원금, 생활용품 등) 모집**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식품 제조기업, 유통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국민 등의 기부 동참 유도
- 기부모집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모집활동 수행
- 식품기부처에 대한 관리를 통한 지속적 기부 유도

나. **영수증 발급**

①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의 경우)**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음·식료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식품을 기부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으로 출력된 기부식품 영수증(붙임5) 발급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가 기부자에게 발급하는 기부식품 영수증은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처리(필요경비) 가능
- 기부식품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

< 참고 : 기부식품 영수증 법적 근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5조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79조 1항은 지정기부금에 관한 사항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타 기업·개인의 경우)

-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개인이 아닌 자가 기부할 경우 또는 기부금품(후원금, 생활용품 등)을 접수하였을 경우 운영주체(법인 등)가 발급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
- ※ [붙임 6] :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63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2)
- 금전 이외의 물품 기부시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로 영수증 발급(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 참고 : 영수증 발급 종류 >

기부자 \ 기부유형	음식료품	非 음식료품	후원금(현금)
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	기부식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주체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다. 기부식품 제공

- 사업자는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해야 함
-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직접경비 :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 기부식품 제공시 기부식품의 특성(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식품의 보관 및 취식방법, 유통기한, 판매·교환 금지 등의 내용을 안내

- 이용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고지하고, 안전한 취식을 위한 별도의 관리를 수행
- 기부식품 제공시 이용자 가구원 수, 시설단체 현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라. 기부식품관리시스템(Foodbank Management System : FMS) 사용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은 식품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내역 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시스템 내부의 전자매뉴얼 또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는 기부식품 모집, 제공시 관련 실적을 실시간으로 기부물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입력으로 기부물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를 대체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http://www.foodbank1377.org>)에서 지역 내 사업 실적을 제공받을 수 있음
- ※ ID, PASSWORD 별도 제공(전국푸드뱅크)

마.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법 제5조제1항)

-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 ※ [붙임 7]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기부식품 모집시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바. 기부금(후원금 등)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

- 운영주체(법인 등) 및 사업장의 기부금(후원금) 전용계좌*를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개설·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사업장이더라도 법인의 기부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사업장 고유의 기부금 계좌를 두어야 함
- * (전용계좌)사업장 명칭이 부기된 운영주체 명의 또는 사업장 명의로 개설하여, 계좌의 용도를 사업장 기부금 모집·사용 전용으로 지정
- 운영주체(법인 등)의 대표와 사업장 대표는 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의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기부금을 기부식품 사업장 운영비, 식품 구매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작성·보관

4. 기부식품의 관리

가. 기부식품 안전성 확보(법 제5조제2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함
 -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붙임 8)을 준수
- 식품위생법상 위생 기준(식품위생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등 관련 규정) 준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함

< 참고 :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정보의 활용

- 사업자는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정보의 상세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해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함

< 위해성 여부 확인 방법 >

○ 접수, 배분과정의 바코드 입력 시 위해상품 내역이 있는 경우 차단 알림

○ 위해상품 연계관리 화면의 상세내역을 확인 후 처리

*위해상품 차단알림은 동일 바코드의 위해상품 등록내역을 식별하여 경고하는 기능으로, 해당 바코드의 모든 상품이 위해 상품인 것은 아님 [즉, 생산시기와 생산처(공장) 등이 다른 경우에는 위해상품이 아님]

나.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 유통기한 관리 : 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참고> 표 참조)

(1) 모집가능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모집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취식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기부식품을 모집하되, 모집가능기한을 준수

※ 모집가능기한에 맞지 않은 식품기부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 등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가공식품·장류·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육가공류는 최소 15일, 농산물의 경우 최소 5일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2) 배분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 모집가능기한 내 식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취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유통기한 잔여일수를 고지
- 유통기한이 적게 남아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취식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예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우선 즉시 배분
- 제빵류 및 농산물의 경우 식품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즉시 취식이 가능한 시설·단체나 개인에게 즉시 배분

< 참고 :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

구 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유통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기한	
				개인	사회복지 시설·단체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20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류,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15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최소 5일 이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 개인이용자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사업장이라도 배부기한 내에 개인이용자에게 배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즉시 배분하거나, 즉시 배분할 수 있는 인근 기부식품제공사업장으로 이관

- 보관중인 기부식품을 수시로 점검하여, 배분기한 내에 배분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분기한 이전이라도 관능검사 결과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기부식품은 폐기조치

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식품사고 사전예방
 - 군·구 담당 부서는 식품위생 담당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생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식품위생교육 여부 확인
 - ※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시설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기부식품 사업자는 기부식품 제공시 이용자가 유통기한 내 식품을 취식하도록 안내하고, 이용자의 보관창고(또는 냉장고) 등을 수시점검
- 식품사고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부식품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군·구청에 **즉시** 보고
 - 군·구 담당자는 식품사고를 조사하여 사고경위, 피해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우선 보고
 - 군·구 담당자 및 기부식품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식품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 시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보고

라. 민·형사상의 책임감면(법 제8조)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제외)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짐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 참고 : 위해식품 등 >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참고 : 형법상 형의 감경·면제 가능 조항 >

-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의 철회·폐업

가. 철회·폐업 신고(법 제3조제3항)

-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을 신고

나. 절차

- 철회·폐업 신고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붙임 9] : 철회(폐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구비서류(전자문서 포함)
 - (1)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 (2) 신고필증

다. 추가 조치사항

-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의 타당성과 기부식품 사용 및 처분(이관) 여부 확인
-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운영 중인 푸드뱅크(마켓)가 사업을 철회 또는 폐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입한 냉동탑차, 냉장고, 컴퓨터 등 운영장비는 관할 군·구에서 회수한 후, 관할 지역의 신고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 동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
-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수리한 군수·구청장은 철회 또는 폐업 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시 및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해당 지역 광역 푸드뱅크에서는 동 사실을 전국푸드뱅크에 보고

6.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붙임 11]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가. 국가 등의 지원(법 제7조)

- 보건복지부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물류센터 및 기부식품 관리시스템(FMS) 운영
 - 지자체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내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인건비, 운영장비, 공공요금·차량유지비 등 경비 지원
- ※ 신고사업자에게만 인건비·경비장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실적 등 평가를 통하여 계속, 추가지원 여부 결정

나. 식품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법 제10조)

-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사 및 사업자의 사무소 및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1) 제공사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기부식품 안전 취급)을 위반
- (2)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

※ 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다. 기부식품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 안전관리

- 지자체는 신고한 사업자가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 및 결과 공개 여부, 식품 유통기한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 모집·제공, 사업장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라. 기부식품제공사업 공정성 제고

- 기부식품 배분, 이용자 선정 등 사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 점검 이행
- 기부식품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에게 배분되는지, 배분기준에 맞게 이용자가 선정되는지, 이용자에게 중복적으로 식품이 배분되지 않는지, 배분금지 대상에게 기부식품이 배분되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마. 기부식품 제공사 및 사업자 상시 관리

- 기부식품 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 점검 이행
- ※ 전년도에 제공한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임의신고는 당연신고 전환, 미신고는 당연신고 필요
- 기부식품 제공사(미신고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기부식품의 안전취급 등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부식품 제공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

7.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가. 시정명령(법 제11조제1항)

- 요건
 - (1) 제3조제1항(임의신고) 또는 제2항(당연신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제공자 및 사업자가 제5조제1항(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또는 제2항(기부식품 안전 취급)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절차 :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 통지를 통하여 시정명령

나. 사업 정지명령 및 사업장 폐쇄명령(법 제11조제2항)

- 요건
 - (1)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6조제1항(기부식품 무상제공)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장 폐쇄시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다. 사업장 폐쇄(법 제11조제4항)

- 요건 : 사업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폐쇄조치의 종류
 -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 표시물의 제거·삭제
 -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함
- ※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
-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 요건
 - (1) 봉인 또는 게시문 부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2)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
 -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를 요청하는 때

라. 벌칙 및 양벌규정(법 제12조, 13조)

- 제6조제1항(기부식품 무상제공)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상제공 위반행위(제6조제1항)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과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마. 과태료(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 요건
 - (1) 제3조제2항(당연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5조제1항(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또는 제2항(기부식품 안전 취급)의 규정을 위반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지도·감독)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 행정처분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군수·구청장
- 사전통지·의견청취 및 부과·징수 등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참조
 - (1) 서면통지 : 해당 위반행위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 ※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기재
 - (2) 의견제출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 (3)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실시
- 징수절차
 - 과태료 징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과태료 체납시(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3)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00	150	300
나.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1)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거나 영수증 등을 보관·작성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300	30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300	300	300

Ⅲ

인력 관리 및 보조금 지원계획

1. 기부식품사업장 인력 관리

가. 인력확보

- 기부식품 사업자는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전담인력, 보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다만, 당연신고 사업자의 경우 전담인력 1인,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함
 - ※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가급적 기부식품 사업을 전담(또는 겸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채용 등의 인건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것을 권고
 - ※ 보조 인력의 범위 : 겸직인력,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
- 지자체는 운영경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고, 사회복지요원·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등을 우선 배치
 -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병무청 수요조사시 적극적으로 인력확보
- 자원봉사자 확보
 -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관리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적십자·공동모금회 등 기타 민간기관 자원봉사단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

나. 종사자 채용

- 직원은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며 공개모집이 원칙임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 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은 모색할 것
 -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범죄경력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 시설장 및 종사자의 범죄 및 성범죄 경력조회 >

○ 조회대상자

- 취업자(운영자 포함), 취업예정자, 비정규직, 운전기사, 시간제 강사,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실습생, 외국인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포함

○ 구비서류

-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등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관장 신분증

<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

❖ 시설장의 경우

○ 법 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5조제2항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다. 종사자 관리

○ 인건비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의 **최소 인건비 지원기준(붙임13)**을 준수

※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최소 지급 권고 기준임(광역은 시 승인기준)

○ 교육훈련

- 사업자는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국푸드뱅크·광역푸드뱅크 등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식품안전 교육기관(식품위생법상)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등 교육훈련 권장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전산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교육 등

○ 건강진단

- 기부식품을 가공·조리·저장·운반하는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종사할 수 없음(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 사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종사시키지 못함(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라. 근로기준법 적용

- (원칙)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종합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할 것

2. 기부식품사업장 운영보조금 지원

가. 지원대상 현황

○ 총 관

구 분	계	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푸드마켓
개 소	25	1	10	14

○ 군·구별 설치현황

군구별	계	중구	동구	남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계	24	2	2	3	3	3	3	2	4	2
기초뱅크	10	1	1	1	1	1	1	1	2	1
푸드마켓	14	1	1	2	2	2	2	1	2	1

○ 신규사업 신청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자),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신고,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나. 보조금 지원액

- 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로써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실적 등을 고려, 군수·구청장 책임 하에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종사자	사업비			비고
			계	인건비	운영비	
총 계	25개소	26명	1,897,706	939,412	958,294	
광역푸드뱅크	1개소	2명	150,786	85,212	65,574	시비 100%
기초푸드뱅크	10개소	10명	561,600	358,800	202,800	시비: 군구비 = 50%:50%
기초푸드마켓	14개소	14명	1,185,320	495,400	689,920	

※ 개소당 지원(처우개선비 포함)

- 기초푸드뱅크 : 56,160천원(시비 50%, 군·구비 50%)
- 기초푸드마켓 : 84,665천원(시비 50%, 군·구비 50%)

- 인건비 : 예산전용금지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가. 보조금 신청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나. 시비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 시비보조 사업계획의 변경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추가경정예산 제출 시 반드시 군·구의 승인 후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고 군·구에서는 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 실적보고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 등

- 시비보조사업 실적보고는 매년 1월 20일까지 제출한다.
- 보조 사업을 변경 승인한 경우 변경된 내역 등 관계서류를 제출한다.

- 사업실적 보고서의 심사제출

- 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 ①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지
 - ② 각 사업별로 사업수행의 효과성 등을 심사하고,
 - ③ 현지 조사를 한 후, 그 의견서를 반드시 붙여 시장에게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IV 기타 행정사항

가. 행정사항

- 장비 및 인건비, 경비 지원은 신고한 사업자에게만 지원하고, 사업실적 등 평가를 통하여 계속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
- 군·구는 보조인력 지원방안 마련하여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 기부식품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 안전관리 확보

※ 기부식품의 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

- 임의신고사업자가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식품에 한함)일 경우 당연신고사업자로 신고하도록 조치

나. 기타사항

- 운영중인 푸드뱅크(마켓) 중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입한 냉동탑차, 냉장고, 컴퓨터 등 운영장비는 관할 군·구에서 회수한 후, 관할지역의 신고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 동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
- 지역사회에 푸드뱅크(마켓) 공익성 확보, 신고한 푸드뱅크(마켓) 홍보 등을 위해 외부현관에 관할 지자체 명칭을 표기 설치하여 신고한 푸드뱅크(마켓)임을 명시
- 광역푸드뱅크는 연도별 사업계획, 예·결산서 및 사업실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기부식품 사업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지침과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른다.
- 사업자는 보조금이 부족할 경우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기타 기부식품 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근로기준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등의 법규 준수
-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등은 “붙임” 자료 등을 참고로 시행하도록 한다.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 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적용 가능
 - 복지할인 내용 : 사회복지시설(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기요금 20% 감액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버지점 www.ke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123), 관할 지사, 지점
 - 구비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전기요금영수증, 사회복지관련 법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신고증

※ [붙임 10]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안내

【붙임1 : 사업자 신고서】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만 해당)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사업장 명칭	신고 종류 임의[] 당연[]		
	소재지	면적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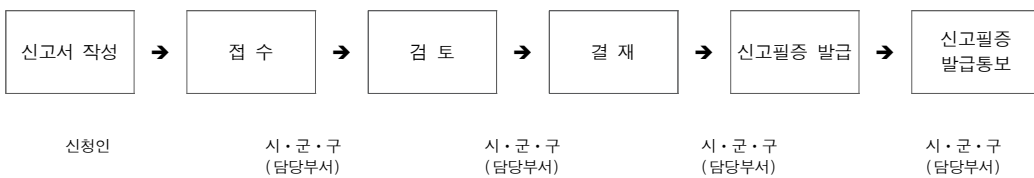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업계획서

1. 기관소개

- 설립목적
- 주요사업
- 조직체계

2.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당위성 및 운영의지 기술)

-
-

3. 설치·운영 사업계획(개조식으로 기술)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현황(최근 3년)
-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성과(최근 3년)
 - 기부실적

구 분	계		기업(식품제조 및 유통, 후원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각종 법인·단체		개인 기부자	
합계	개소	천원	개소	천원	개소	천원	명	천원
연도								

- 지원실적

구분	합계		재가결식자		사회복지 이용시설 (무료급식소포함)		무료급식소		사회복지단체 및 생활시설		전국·광역 등 푸드뱅크 이관처리 실적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합계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연도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관리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시설·장비현황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후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 기대효과

4. 사업예산 계획

5.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붙임 3 : 사업자 신고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사 업 자 신 고 증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남/녀) :

주 소 :

사업자명칭 :

소 재 지 :

사업장면적 :

신고의 종류:

조 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뒤 쪽)

[illegible]

【붙임 4 :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시·군·구	
주소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이용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부식품이 필요한 자와 인근지역 이용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자 특성	<input type="checkbox"/> 결식아동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재가어르신 <input type="checkbox"/> 재가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독신가정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가족관계	동거가족()명, 관계()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구소득	월소득() 소득내역()				
가정형편					
관련증빙자료	※ 이용신청서 작성 시 관련 증빙서류(의료급여증 또는 긴급지원에 관한 정황증빙 등) 첨부				
<p>본인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푸드뱅크, 푸드마켓)로 부터 제공받은 기부식품 또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제공받은 기부식품을 유통기한 내 소비할 것을 서약함.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함.</p>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청인</div>					
기부식품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업무에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서 및 추천관련 서류에 기재된 정보, 개인이력(기부식품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력)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상기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기부식품 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 본 사업장은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제공내용 : 위 개인정보 수집 항목 상의 개인정보

– 수집정보 활용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3호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사업단의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에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

- ☐ 귀하는 상기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기부식품 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No. 2012-0001

기부식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공정, 투명하게 제공되며
활용됩니다.

*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증할 경우 기부식품(장부가액)전액을법인세법시행령 제 19 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55 조에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 영수증

기 부 금 품 :	일금	원정	(₩))
기 부 내 역 :		(수량:	개)	
기 부 일 자 :	2012. 00. 00	(건수:)	
기 부 자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빌딩 00층

2012년 월 일

기부식품 수령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0 0 0 (인)

* 전국푸드뱅크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전국푸드뱅크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전화 : 2077-3985-6 팩스 : 02-713-7297

【붙임 6 :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	--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④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③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 ④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4호서식]

[illegible]

○ 기부받은(제공한)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I. 목 적

-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기부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식품기부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식품을 이용하도록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요령을 마련하고자 함

II. 기본방침

가. 모든 기부식품 대상 관능검사 실시

- 유통기한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수량이 많은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내용물을 확인·검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

나. 조리식품은 이용자 제공 전 또는 섭취 전 반드시 재가열

- 조리식품은 가열하여 활용하되 특히 여름철과 위해도가 높은 식품은 세심한 주의 요망

다. 기부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

-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및 관능검사결과 식품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처리

라.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등 전문가 도움 요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에 대하여 위생관리책임이 있으며, 동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음
- 제공자 및 사업자 또는 담당책임자가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마. 폐기대상 식품이 기부된 경우도 기부자에 대한 예의 준수

- 폐기대상 식품의 기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선의의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식품기부에 참여하도록 예우 갇춤

III. 기부식품 관리 3대 원칙

가. 청결의 원칙

- 1) 기부식품이 아무리 안전한 경우라도, 전달과정 및 보관 등 취급시에 청결을 등한시하게 되면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할 수 없음
- 2) 식품위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생·청결」은
 - 단순히 식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결한 설비, 식품 취급자의 청결 등을 의미하며 특히, 식품취급자인 제공자 및 사업자 등 관계 종사자들의 청결상태 유지가 매우 중요함
- 3) 기부식품을 관리하여서는 안 되는 사람
 - 설사·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질환(화농증 등) 또는 음식물을 통하여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환에 감염된 자

- 종사자 또는 그 동거인이 법정전염병환자이거나 그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와 보균자임이 판명된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종사자 또는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자와 동거하거나 동일 직장에서의 종사자로서,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나. 신속의 원칙

- 어떤 세균도 존재하지 않는 무균상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므로 식품에 부착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기부된 식품은 배급·취식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해당 보관조건에 따라 냉장·냉동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함
-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준수
 - 도시락류는 7시간 경과후부터 식중독 발생위험이 빠르게 높아지므로, 일반 도시락·햄버거류의 경우 여름철(6~9월)에 10시간, 그 밖의 계절에는 12시간이 경과하면 위험함(김밥의 유통기한은 7시간)

다. 냉장 또는 가열의 원칙

- 식중독균은 그 종류에 따라 증식의 최적온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36~37℃) 범위에서 잘 자람.
- 5℃에서부터 60℃까지 광범위한 온도 범위 내에서 증식이 가능하므로 식품보관 시 이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온도가 식중독균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10℃	0℃	5℃	10℃	37℃	60℃	65℃
거의 발육하지 않음	발육하는 세균도 있음	모든 세균이 활발히 증식	어떤 종류의 세균은 사멸하지 않음	대부분 세균이 사멸함		

IV. 일반적인 식품의 안전성 검사

가. 서류검사

- 유통기한과 같이 문서나 표시 등 활자로 된 정보를 활용
- 기부업체에서 발급한 기부대장에 기초하여 식용으로서의 적합여부 판단

나. 관능검사

- 직접 사람의 오감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서 기부된 모든 식품은 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특히 쉽게 상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표본을 직접 시식하여 안전성 검사
- 관능검사 기준

① 생식 종류의 관능검사 기준

식품의 종류	식 별 요 령		
	양 호	보 통	불 량
가금육 (닭고기류)	탄력이 있고 살이 단단함.	—	이상한 냄새가 나고 끈적거리거나 어두운 색을 띰.
식 육	쇠고기는 선홍색을 띄고 탄력이 있음. 돼지고기는 지방의 색이 희고 탄력이 있으며, 살코기는 옅은 분홍색을 띰.	—	검은색, 초록색, 보라색 등의 얼룩이나 반점이 있음. 이상한 냄새가 나고 탄력이 없음.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 후)	살이 단단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음	냄새가 비릿해짐.	물에 뜸.
	비늘이 피부에 잘 붙어 있으며, 어종 특유의 색깔과 싱싱한 광택을 띰.	탄력성이 조금 떨어짐.	몸체는 탄력이 없고 흐물흐물함.
	눈은 돌출하였고, 혈액의 침출이나 혼탁이 없음.	눈은 돌출하지 않고 약간 혼탁함.	눈은 들어가고 현저하게 혼탁하거나 떨어져나가고 있음.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 후)	아가미는 선홍색임	아가미는 선명하지 못하고 소량의 점착물이 있음	아가미는 암록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남
	배 부분을 누르면 탱탱함	복부가 약간 무르기 시작함	복부는 주저앉고, 물러옴
	살색이 투명하고, 살을 뼈에서 발라내기 어려움	살은 약간 불투명하고 혈관도 약간 불투명함	살은 뿌옇고 혼탁함
계 란	껍질표면이 까실까실하고, 광택이 없음	—	깨보면 난백이 퍼짐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음	—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남
	전등빛에 비추면 밝고 투명함	—	전등빛에 비추면 어둡게 보임
채소류	광택이 있고, 싱싱함	벌레가 먹거나 상처가 있어도 그 부분을 잘라내면 싱싱함.	잎이 시들고 탄력이 없음
콩나물, 숙주류	조각이 단단함.	—	수분이 너무 많고, 내용물을 눌러 보았을 때 조각이 쉽게 문들어짐.

② 건식품류의 관능검사 기준

- 건고추류는 기본적으로 기부 받지 않는 것이 좋음.
 - 가을에 수확하여 해를 넘길 경우 고추 안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푸른곰팡이가 피어있는 데 사실상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런 제품은 암 발생의 원인이 됨
 - 건고추류는 가격이 비싸 다른 제품에 비해 그해 생산된 안전한 제품은 기부받기가 어려움.
- 말린 제품류(건어물류, 육포, 건과일류 등)
 - 원래의 색감보다 진해져 탁한 색감을 띠거나, 조각이 물러졌거나, 냄새가 심할 경우 부패되고 있는 상태임.

③ 가공식품의 관능검사 기준

- 가공식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간(제조일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경과 유무 및 장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 2주 정도로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의 경우에는 부패의 속도가 빨라 며칠 사이에 해당 제품을 먹을 수 없게 됨.
 - 유통기간이 2, 3년씩 되는 제품의 경우(주로 캔류임)에는 수주일 또는 수개월 내에 안전성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음

다. 정밀검사 : 이 · 화학적 검사

- 관능검사를 통해서도 식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부량이 많은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적합판정 후 활용
- 정밀검사는 검체를 채취하여 시 · 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

<참 고>

○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	
- 유제품류 - 생선가공품류 - 육가공품류	우유, 요구르트, 버터, 치즈, 우유가 들어간 음료류 등 각종 생선 캔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햄, 소시지, 족발 등
○ 상대적으로 위해가 적은 식품	
- 탄수화물류 - 건조식품류 - 장 류	떡류, 빵류, 과자류, 사탕류 등 마른멸치, 미역, 오징어 등 고추장, 된장, 간장류
○ 특히 주의하여야 할 식품	
- 조리식품 중 샐러드류, 달걀구이, 자른 햄과 소시지, 생선회 등은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여름철에는 이런 식품류는 배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식품류의 경우도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다량 섭취 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	

V. 기부식품 보관 및 운송요령

가. 식품의 보관기준

-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온도에서 보관하여야 함.
-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관방법(실온, 냉장, 냉동 등)이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음.

식 품 의 종 류	보 존 온 도
· 곡류가공품(밀가루·전분) · 설탕	실온 실온
· 포장육(진공포장육 제외) · 햄류 및 소시지, 분쇄가공품(가열제품) · 베이컨 · 멸균·건조식육제품, 유처리 육제품 · 기타식육제품 - 냉장제품 - 냉동제품	-2~0℃ 0~10℃(비가열소시지0~5℃) 10℃ 이하 실온 -2~10℃ -18℃ 이하
· 어육제품 - 냉장제품 - 냉동제품 - 멸균·건조어육제품	0~10℃ -15℃ 이하 실온
· 유지류(식용유 등)	실온
· 날계란 · 알가공품(건조식품 제외)	10℃ 이하 5℃ 이하
· 우유, 농축유, 탈지유, 유크림류 · 연유 · 버터류·치즈류 - 냉장제품 - 냉동제품	0~10℃ 실온 0~10℃ -18℃ 이하
· 신선 과실·채소류	10℃ 이하
· 신선 어패류	5℃ 이하

식품의 종류	식 별 요 령
진공 포장된 제품 (햄, 소시지, 국수류 등)	포장지와 내용물이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어야 하는 제품이 포장과 내용물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미 이물질이 발생하여 포장상태가 변화한 것으로 유통기한 이전 제품이라도 부패하였을 가능성이 큼.
콩제품(두부류)	표면에 점액이 있고 겉면이 분홍빛을 띰. 특히, 부패도가 높을수록 악취가 심함.
포장된 국수류 (냉면, 쫄면, 가는 국수류 등)	내용물에 곰팡이가 피거나 내용물간에 흰 실 같은 이물질이 있으면 상한 상태임.
음료수류	팻병에 들어있는 경우 흔들어 햇빛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함. 단, 제조상 자체 액기스(내용물)이 들어있는 종류는 다름.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토마토 주스 등 주로 팻병 제품보다 고가격 제품들임)
캔 류	부풀어 있거나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함. - 찌그러진 부분으로 공기 등 이물질 유입 가능 - 특히, 육류제품의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치명적인 물질이 존재할 우려가 높음.
우유, 요구르트 등	상하면 시큼한 냄새가 남.
수산가공품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내용물이 서로 엉겨서 덩어리져 있는 것은 상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조리해서 먹어야 함.
초콜렛	본래의 갈색에서 색이 흐려져 있고, 색이 고르지 않으며 부분 부분 흰빛깔의 다른 느낌을 주며, 대체로 원래보다 심하게 건조되어 있음.
어묵류	포장지와 내용물간에 가는 실 같은 이물질이 발생되어 있고, 미끈미끈한 점액이 생겨있음.
유당처리제품(도우넛, 튀김만두, 튀긴 과자류등)	기름에 튀긴 가공품류의 색이 너무 진한 갈색을 띠는 것은 산화·부패된 기름에 튀긴 것으로 식중독 및 노화의 원인이 됨
냉동가공품 (돈까스, 만두류등)	내용물이 서로 엉겨있는 것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저하된 것임
탄수화물가공제품 (빵류, 떡류 등)	제품의 한부분에 곰팡이가 핀 경우에 전량 폐기토록 함. 이미 제품 전체에 곰팡이 포자가 퍼져있는 상태이므로 곰팡이만 떼어내고 먹는 것은 위험함.

나. 기부식품의 운송 · 보관요령

1) 일반원칙

- 냉동·냉장 유통 또는 보관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적정설비를 갖춘 운반차량 혹은 용기를 이용하여 운송 또는 보관하도록 함.
- 운반과정 중 용기가 파손되거나 먼지 또는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 재가열이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식품의 중심부 온도가 적어도 75℃이상에 이르도록 가열하여야 함.
- 재가열된 식품은 더운 상태(60℃이상)에서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소비되지 않은 식품은 폐기처분하여야 함.
- 검수가 끝난 식품은 바닥에서 20cm이상의 높이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관창고의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기탁식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임.

2) 냉장·냉동고의 관리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채소류를 보관하는 장소는 10℃전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나

- 문의 개폐를 고려하여 냉동고는 -20℃이하, 냉장고는 5℃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도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 자동기록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냉장·냉동고는 용량의 70%이하로 보관하고, 문의 개폐는 신속하고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 냉장·냉동고는 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 식품으로부터 유출된 침출액 등에 의해 더러워진 경우에는 그때마다 청소를 하여야 함.
- 시설의 청소는 모든 식품을 작업장내에서 완전히 반출하거나 청소에 따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실시하여야 함.
- 리스테리아 등 병원성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바닥 및 기구류 등은 가능한 건조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3) 냉동·냉장차의 관리

- 관리는 냉장고의 원칙에 준하여 실시함
- 청소는 배송 후 냉동·냉장 작동장치를 끈 후에 내부청소를 바로 하고, 내부 환기를 시켜 차 내부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배송 시 식품 침출액이 배출되었을 경우 소독 청소를 하도록 함.

VI. 행정사항

- 가.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은 보건소 및 군·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나. 전국 및 광역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의 위생적인 모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관능검사기법 등을 수집·연구 및 보급 강구

【붙임 9 : 철회(폐업) 신고서】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12.>

철회·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철회(폐업)일		철회(폐업)사유	
	신고증 분실사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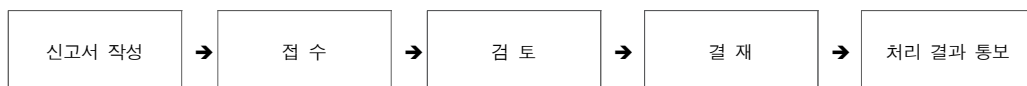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2. 신고필증 ※ 사업자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0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135-79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영업처 영업운영팀 차장 강미숙

http://www.kepco.co.kr FAX 02-3456-4598
☎ 021-3456-4571 beam@kepco.co.kr

문서번호 영업(운)82102-5405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시행일 2009. 9.24.

수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참조 복지자원운영실장

121-805

제목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복지할인 적용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문 푸드뱅크운영과305-778(2009.08.18)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당사 예하사업소에 상기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할인 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 ② 전기요금영수증
- ③ 사회복지관련 법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신고증. 끝.

결	담당	과장	부장	신장	사무총장	회장
재	이영민	이영민	이영민			



한국전력공사



OF4D-0004-7A18-1394

<붙임 11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

□ 목 적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실태를 점검

□ 기본사항

푸드뱅크(마켓) 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FAX	담당자(H·P)
사업장 신고 구분(임의, 당연)		신고일자/변경사항	비 고	

□ 신고유형에 따른 사업장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점검

○ 임의신고 사업장

순번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1	보관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관창고는 시건장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이어야 함 • 보관창고는 주위의 위생상태가 청결한 장소이어야 함 • 식품창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업무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 또는 타 사업에 필요한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겸용으로 판단함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운반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이상 갖추어야 하고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함 • 운반차량의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확인 	
3	냉 장 (냉 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모델명·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당연신고 사업장

순번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1	보관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관창고를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보관창고를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를 확인 	
2	운반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이상 갖추어야 하고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함 운반차량의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C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C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확인 	
3	냉장(냉동)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함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C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C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모델명, 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소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4	인력 (전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전담직원이란 예산 항목 상에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있고, 업무분장표에 푸드뱅크업무 만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함 업무분장표, 인건비 지급명세서, 직원 인터뷰등의 서류를 확인 	
5	인력 (보조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함 보조인력에는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푸드뱅크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인력 모두 포함됨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었는지 여부 자원봉사자는 평균 주 1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및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 영수증, 인수증 등의 증빙서류 비치 작성 및 보관 행정관리문서로 기부식품 접수문서대장, 기부식품 배분문서내역, 기부자 관리내역, 이용자 관리내역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모집일자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안전한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이수 여부 2016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식품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발생 시 대책과 비상연락처 비치 등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확인 	

□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및 사업장 신고 변경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무상 제공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사항으로 기부식품의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함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직접모집경비를 초과할 수 없음(직접모집경비 한도는 실제 운송회사에 지출된 물품운반비용기준이며, 해당 물품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장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의신고 사업장에서 전년도 기부식품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신고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016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 급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인천광역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써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 직원은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급

제4조(봉급)

1. 직원의 월 봉급액은 【 별표1 】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며, 정원이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2. 직원 수당 기준표에 의한 수당이외의 별도 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 법인 운영 규정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원수당에 대하여서는 법인전입금에 의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 별표1 】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 해당 직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직원을 채용할 경우 【 별표3 】에 의거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4. 경력기간의 계산 : <첨부 1> 종사자 보수지급관련 세부운영기준에 의해 적용 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 정직 : 18월
 - 나. 감봉 : 12월
 - 다. 근신 또는 견책 : 6월

제4장 보수의 지급

제10조(보수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 보수는 【 별표1 】의 봉급과 【 별표2 】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 법인이 수당 지급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조금(교부세 및 시비로서 매년초 확정 내시된 보조금)외의 별도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되, 출장·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 채용, 승진, 또는 기타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 등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퇴직금 및 각종 사용자 부담금

제13조(퇴직금)

1.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복지관(기관)은 퇴직연금법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각종 사용자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및 산재보험료 부담금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제15조(육아휴직)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16조(유산·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준용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 별표 1 】

2016년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직원 봉급 기준표

(단위 : 천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668	12	2,306	23	2,843
2	1,707	13	2,354	24	2,881
3	1,754	14	2,412	25	2,918
4	1,792	15	2,468	26	2,951
5	1,838	16	2,523	27	2,979
6	1,906	17	2,575	28	3,006
7	1,968	18	2,625	29	3,033
8	2,057	19	2,673	30	3,059
9	2,141	20	2,718	31	3,084
10	2,200	21	2,762		-
11	2,275	22	2,803		-

※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공통 지침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 직원 봉급 기준표 적용

【 별표 2 】

2016년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직원수당 지원 기준표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설날 : $\frac{\text{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times 60\%}{12}$ 추석 : $\frac{\text{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times 60\%}{12}$	설날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 지급일(또는 설날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직원 (단, 부양가족중 자녀수의 제한 없음) ※부양의무자와 동일 주소	정액 20 (배우자 40)	매월 정기보수일 지급일에 지급
(3)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수행한 직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times 1/209 \times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2014년까지 지급했던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은 2015년부터 월 기본급에 포함되어 별도 수당으로 지급 제외

-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직원의 매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지급대상 직원은 인천광역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규직원임 (대체인력, 계약직 제외)
- 연장근로수당
 - 보조금으로는 월 8시간까지 지원하며 초과액은 운영주체 전입금으로 충당
 - 연장근로시간은 야간근무의 경우 19:00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18:00부터 초과분에 대해 인정
 - 연차유급수당은 2014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의 재원으로 지급하되 근로기준법 준수

※ 지원하는 보조금이 부족할 경우 사업자는 전입금, 후원금 등으로 인건비 지원

【별표 3】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인정경력

구 분	환산율	인 정 대 상 경 력
1. 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p>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p> <p>→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 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p> <p>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p> <p>*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p> <p>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p> <p>→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p> <p>*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p> <p>다.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p>
2. 유사경력	80%	<p>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p> <p>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p> <p>*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p> <p>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p> <p>※ (예시)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p> <p>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p> <p>※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p>

구 분	환산율	인 정 대 상 경 력
		<p>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p> <p>※ (공통)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적용</p> <p><예 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다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 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 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p> </div> <p>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p> <p>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p> <p>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 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p> <p>마.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p> <p>※ ㉕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p> <p>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 ㉖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9.1.1부터 적용</p> <p>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 ㉗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6.1.1부터 적용</p> <p>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재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 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p> <p>자.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구 분	환산율	인 정 대 상 경 력
		<p>※ 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p> <p>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p> <p>※ ㉕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p> <p>파.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p> <p>※ ㉖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p> <p>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p> <p>※ ㉗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p> <p>거.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직원(4대보험가입)으로 근무한 경력</p> <p>※ 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p> <p>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p> <p>※ ㉙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6.1.1부터 적용</p> <p>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 ㉚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p> <p>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 ㉛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p>

〈첨부 1〉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 보수지급관련 세부 운영기준

1.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참고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예) 20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하되(예: 1.5 ~ 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1. 31 ~ 2. 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03. 1. 5 ~ '04. 1. 4 : 1년
 - '04. 1. 5 ~ '04. 3. 4 : 2월
 - '04. 3. 5 ~ '04. 3. 8 : 4일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 : 80%인정

▷ 경력인정 : 1년 8월 13일

· '93.11.15~95.11.14 : 2년 × 0.8 = 1.6년 = 1년7.2월 = 1년7월6일(30일×0.2)

· '95.11.15~95.12.14 : 1월 × 0.8 = 0.8월 = 24일(30일×0.8)

· '95.12.15~95.12.31 : 17일 × 0.8 = 13.6일 = 13일(소수점이하 절사)

다.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1)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 59조)

(2)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입하여 복무한 경력
-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 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 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 1. 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 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적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 6월 미만의 실역미필 보충역 : 군 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 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 경력 인정

라.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1)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 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를 통해 경력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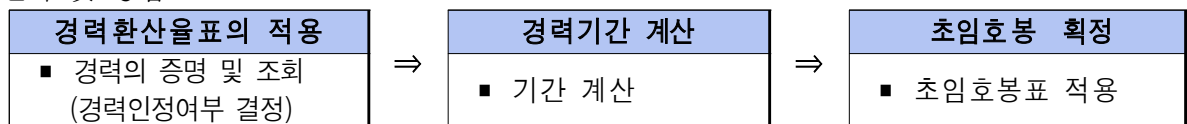
(2)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 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 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

마. 호봉의 확정

(1) 초임 호봉의 확정

- 대 상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 시 기 : 신규채용일
- 절차 및 방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함
- 초임호봉의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직원 호봉책정(경력인정) 부정적 사례 다수 발생

⇒ 호봉확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관할 군수·구청장이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확인
(직원 채용 시 및 승급 시 관련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및 담당부서에서 확인 조치)

(2) 호봉의 재확정

- 대 상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 확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확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시 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재 확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 확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 확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 확정하는 경우는 재 확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 확정함.

○ 방 법

- 호봉을 재 확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확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2. 수당

가.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함)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2015년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직원 봉급 기준표의 호봉 금액을 말함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월 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급 : 승급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급 : 승급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나. 가족수당

- (1) 지급액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 지급(배우자 4만원, 다른 부양가족 2만원, 4인 이내, 자녀수는 제한 없음)

- (2) 지급방법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1인의 직원에게만 지급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인천시의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 불가 -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급 방지)

- (3) 부양가족 범위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①~③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및 만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함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함

참고 가족수당 예시

-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2005. 4월부터 2015.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직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 기관에서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 불가
 - 다만,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 지급 가능
- 직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 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 아님

참고 부양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및 만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에 정도가 심한 자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다. 시간외근로 수당

(1) 시간외근로 인정범위 : 월 8시간 까지 지원

(2) 지급액 :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시간외근로수당	종사자	시간외근로시간당 [통상임금(월보수액) × 1/209 × 1.5]

(3) 지급방법

- 월 12시간 근무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으로는 월 8시간까지 지원하며 **초과액은 운영주체 전입금으로** 충당
- 연장근로시간은 야간근무인 경우 19:00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18:00부터 초과분에 대해 인정, 휴일근무인 경우 09:00부터 적용
- 조기출근의 경우 08:00 이전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인정
- 명령에 의한 당직근무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수당지급에서 제외
- 연장근로수당은 시간외근무명령서를 기본으로 하고 출퇴근현황을 첨부하여 일일 결재를 득한 사항만 인정함.

(4) 시간외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 시간외근무의 명령권자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 시간외근무의 명령
 - 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로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시간외근무의 명령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시간외 근무명령서 (별지1)에 의함.
 - 사전에 시간외근무명령 없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근시 당직근무자 등의 확인을 받아 다음날까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 시간외근무의 확인
 - 회계책임자는 시간외근무명령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시간외 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하며, 정규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시간외근무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은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개시 전까지 비치된 시간외 근무명령대장에 명령 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시간외 근무내역의 통보
 -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군수·구청장에게 운영비 요청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 매월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별지3)을 작성하여 시간외 근무명령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연차유급휴가 수당

(1)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당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전 종사자

(2) 지급액 : 1일 [통상임금(월보수액) × 1/209 × 8]

(3) 지급시기 : 매년 12월 정기보수 지급일

(4) 휴가규정 : 별표 4

-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는 절상함)

※ 연차유급수당은 2014년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운영주체전입금 및 비지정후원금 등에서 근로기준법 준수하여 지급

마. 기타 휴직시 각종 수당 등 지급여부

(1) 공무상 질병휴직 :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을 지급

(2) 기타 사유에 의한 휴직

- 급여 및 제수당 미지급
- 특수근무수당 · 종사자 장려수당 :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3.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하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련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시비 지원

- 출산휴가 중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음
- 대체인력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 직위가 있는 과장(팀장)급 등이 출산휴가·휴직할 경우 시설 내 업무대행자(정규직원)가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인력은 실무급을 채용
-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지원대상자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직종(사회복지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계약직)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음
 - 대체인력의 임금기준은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준은 자체 운영규정 내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2)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1명만 지급

○ 지급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 : 월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 : 100분의 15, 7월 1일 이후 : 100분의 25

-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 지급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 육아 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 신청 시기

-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함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함
- 단,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문의

4. 출산전후휴가 급여

(1) 출산전후 휴가란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2) 출산전후 휴가기간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3)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됨

(4)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5) 지 급 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 통상임금 : 통상임금산정지침 제2조(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

(6)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날로 본다)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부,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5. 유산 · 사산휴가

- 기관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급여 지급 기준은?

- 유산·사산급여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지급기준 동일

6. 사용자 부담금

- ※ 운영기관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수시 변동사항을 직접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

구 분		보험료기준	보험료율			비고
			계	근로자	사용자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9%	4.5%	4.5%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	6.07%	3.035%	3.03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3.1%	6.55%	6.55%	〃
고용 보험료	계	보수총액	1.55%	0.65%	0.9%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보수총액	1.3%	0.65%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	0.25%		0.25%	
산재보험료		보수총액	0.7%		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퇴직적립금		보수총액	1/12		1/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 중도 입·퇴사시 인건비 지급방법

구분	종류	지 급 기 준	입·퇴사시
보조금	봉급	입사일 일할 계산 퇴사시에는 15일 이하는 일할계산 16이상은 전액지급	일할계산 또는 전액지급
	가족수당	입사 및 퇴사일 일할 계산	일할계산
	퇴직적립금	입사 및 퇴사일 일할 계산	일할계산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자 전원 지급	지급일 기준
	연차수당	년말 또는 퇴사시 정산 지급	정산지급

8. 퇴직금의 지급 및 관리

가. 퇴직금의 관리

- 지급대상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함
- 지 급 액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근속기간
 -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
 -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함

나. 퇴직적립금의 관리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 하여야 함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할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단,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주택구입 등 가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개 사업에 1회에 한함)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별지 1]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서

연번 _____

부서명 : (20 . .)

결 재	담 당	사무국장	시설장

직위	성 명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일, 숙)직 성명 (서명)

- ※ 연번은 시간외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연장, 야간, 휴일로 기재
-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별지 2]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년 월분

연번	일 자	부서명	근 무 자 현 황			비 고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에 기재, 종류는 연장·야간·휴일로 표시

[별지 3]

()월중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 통보

수신 : ○○군구

발신 : 시설명

소 속	직 위	성 명	지급할 시간(일)수			출 근 근무일수
			연장근로 수 당	야간근로 수당 (시 간)	휴일근로 수 당	

<비 고>

1. 단위 : 연장근로수당(시간 또는 분), 휴일근로수당(일), 야간근로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시()로 기재)
2. '지급할 시간(일)수'란 중 야간근무 2교대의 경우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에 중복기재하지 않음

[별지 4]

시 간 외 근 무 확 인 대 장

년월일	소 속	직 급	성 명	근 무 현 황		비 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 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종사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이상 조기 출근한 경우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당초 명령시간 보다 초과로 근무하게 되는 종사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 후 매일의 시간외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근자 바로 아래란에 근무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인계

[별표 4]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휴가 규정

종류	지 급 방 법
연차 휴가	<p>①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②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계속하여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③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p> <p>④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p> <p>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 한 것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보호를 위한 휴가로 휴업한 기간.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u>다만 사용자</u>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⑧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병가	<p>① <u>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 - <u>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u> <p>② <u>병가기간 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 : 연 60일 범위 내</u> - <u>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연 180일 범위 내</u> <p>③ <u>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음</u></p> <p>④ <u>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u></p> <p>⑤ <u>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u></p>

종류	지 급 방 법																														
공가	①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u>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u> - <u>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u> - <u>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u> - <u>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 - <u>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u>																														
특별 휴가	①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단, 유급으로 한다. <table><tr><th>구분</th><th>대상</th><th>일수</th></tr><tr><td rowspan="2">결혼</td><td>본인</td><td>5일</td></tr><tr><td>자녀</td><td>1일</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5일</td></tr><tr><td>입양</td><td>본인</td><td>20일</td></tr><tr><td rowspan="5">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일</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조부모·외조부모</td><td><u>3일</u></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u>3일</u></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일</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일</td></tr><tr><td>탈상</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1일</td></tr></table>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조부모·외조부모	<u>3일</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3일</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조부모·외조부모	<u>3일</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3일</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기타 사항	① <u>연차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u> ② <u>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u> ③ <u>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미산입</u> ④ <u>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함</u>																														

<붙임 14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4.28 법률 제10606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 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의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 단서의 직접 경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식품 중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①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삭제
 -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⑧제4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7918호, 2006.3.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 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 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0>까지 생략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2>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5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4.12.9 대통령령 제25834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제4조(신고의 기준)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1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중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8.6.>]

제7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제7조의2에서 이동 <2014.8.6.>]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4.12.9.]

부칙 <제19690호, 2006.9.22.>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4454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34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보관창고

- 가.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1. 보관창고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 비

가. 운반차량

-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 력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 3)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1호	100	150	300
나.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 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2호	50	100	200
1)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거나 영수증 등을 보관·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2호	300	30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3호	300	300	300

<붙임 16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5.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4.12.12.>

1. 삭제 <2014.12.12.>
2. 사업계획서[영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삭제 <2014.12.12.>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4.12.12.>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철회·폐업신고 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회·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12.12.>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3. 신고필증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 철회·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의 서식: 2015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5.1.5.]

부칙 <제369호, 2006.9.25.>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 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 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 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 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1-16 조례 제 5059호

(일부개정) 2015-04-13 조례 제 5471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자”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기부식품”이라 함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3. 기부식품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사회복지요원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및 기부식품제공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그 밖에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4.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5.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9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개정 2015-04-13>

제7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제공 등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6년 인천 푸드뱅크·마켓 현황

구분	기관명	사업주체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
광역	인천광역푸드뱅크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한창원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503호(간석동)	891-1377
기초 푸드 뱅크 (10)	중구푸드뱅크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박종실	중구 홍예문로 77(전동)	761-1399
	동구푸드뱅크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김도진	동구 화수로 66(화수동)	763-1377
	남구푸드뱅크	백암한마음봉사회	배동환	남구 매소홀로 418번길 14-57(학익동)	861-1377
	연수구푸드뱅크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임인순	연수구 원인재로 315(연수동)	818-1377
	남동구푸드뱅크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최병래	남동구 소래로 645(만수동) 남동복지관 1층	469-1377
	부평구푸드뱅크	인천YWCA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고성란	부평구 평천로 447(삼산동)	519-1377
	계양구푸드뱅크	인천내일을여는집	이준모	계양구 계양산로91(계산동)	555-1377
	서구푸드뱅크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최윤형	서구 신석로121번길 10 (석남동)	574-1377
	서구태화푸드뱅크	태화복지재단	양미희	서구 심곡로 124번길 10 (심곡동)	564-1377
	강화군푸드뱅크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안철혁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12	932-1378
기초 푸드 마켓 (14)	중구푸드마켓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박종실	중구 홍예문로77(전동)	777-0377
	동구푸드마켓 1호점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김도진	동구 금곡로 81번길 27 (송림동)	773-2377
	남구푸드마켓 1호점	백암한마음봉사회	배동환	남구 경인로 333(주안동)	875-1377
	남구푸드마켓 2호점	한일순복음교회	신덕수	남구 인주대로 128(용현동)	889-1377
	연수구푸드마켓 1호점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임인순	연수구 비류대로 519번길 30-2(선학동)	817-1377
	연수구푸드마켓 2호점	옥련중앙교회	한종근	연수구 청량로 184번길 17 (옥련동)	834-2377
	남동구푸드마켓 1호점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최병래	남동구 소래로 645(만수동) 남동복지관 1층	463-1377
	남동구푸드마켓 2호점	간석제일교회	장자옥	남동구 백범로 371(간석동)	431-1377
	부평구푸드마켓 1호점	인천YWCA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고성란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56 (부개동)	426-1377
	부평구푸드마켓 2호점	행복한사람들	김상현	부평구 경원대로 1367번길 18(부평동)	511-1377
	계양구푸드마켓	인천내일을여는집	이준모	계양구 계양대로 126 (작전동)	551-1377
	서구푸드마켓 1호점	서인천제일교회	이두형	서구 승학로 233(심곡동)	576-1377
	서구푸드마켓 2호점	대은교회	전명구	서구 거북로 124(석남동)	584-1377
	강화군푸드마켓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안혁철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12	934-0808